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보고서

2019. 7. 23.



I 조사의 배경 및 개요

1. 조사의 배경

우리사회가 반려인구 1000만 시대에 들어선 것이 이미 수년이다. 반려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사회가 동물감수성을 높이고, 동물권, 동물복지에 있어 성숙해지는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이른바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불법생산업의 난립과 유통과정에서의 동물학대적 요소들을 야기하는 부작용도 함께 가져왔다.

음지에서 횡행하던 강아지공장의 문제는 2016년 동물자유연대의 고발로 수면 위에 드러났고, 많은 시민들이 그 잔혹한 실태에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들의 공분에 2008년 등록제로 시행되었으나 2012년 신고제로 후퇴했던 생산업은 2017년 허가제로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2017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생산업의 허가제 전환과 함께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위법령에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강아지공장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분간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판매과정에서 강아지에 대한 정보와 생산업자 정보의 일부 제공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1년 후인 2018년 3월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의 시행 100일 즈음 동물자유연대는 관련 규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8년 6월 1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국내 최대 유통사인 신세계 이마트에서 운영 중인 '몰리스펫샵'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몰리스펫샵은 동물을 판매 중인 26개(전체 지점은 35개) 모든 지점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대기업에서 운영 중인 펫샵마저 기본적인 규정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업계의 변화는 더디기만 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개정된 법 시행의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판매업자들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조사에 나서게 됐다.

2. 현장조사 목적

국내 동물보호법은 많은 동물들의 희생 위에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7년 법 개정 역시 강아지공장장에서 태어나 새끼 낳는 기계로 살다 버려지고 죽음에 이른 수많은 동물들의 절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법과 규정은 강화되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고는 했다. 지난해 동물자유연대의 '몰리스펫샵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조사'는 이러한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 관련법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알리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준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2018년 시행된 영업자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지자체에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요구하는 데 있다.

3. 현장조사 범위 및 방법

현장조사는 판매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중 판매하는 동물에 대한 정보와 생산업자의 정보제공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반려동물판매업체 밀집지역과 전국에 지점을 갖춘 동물판매업체의 서울 및 수도권 지점이 그 대상이다.

○ 조사 대상

- 반려동물판매업 밀집지역 : 서울 충무로, 대구 반월동, 부산 양정동, 수원 남문 지역의 동물판매업체 총 39업체
-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두 개 업체의 서울 및 수도권 지점 총 11개 지점
- 총 50개 업소

○ 조사 기간은 2019년 2월 22일(금)부터 3월 8일(금)까지로,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 조사 내용

반려동물 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그 중에서도 판매업자 정보와 생산업자 정보, 판매동물의 정보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항목인 영업장 내부 등록증 및 요금표 게시와 동물정보 표시, 계약서 제공 의무 게시,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기재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은 조사권한이 없는 활동가들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 조사 대상 50개 업소 중 39개 업소에서만 진행되었다.

○ 조사 방법 : 활동가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조사항목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현장조사 한계

본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 2019년 6월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4,300여개 동물판매업체 중 주요 동물판매업체 밀집 지역과 수도권 내 업체에 제한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영업자가 갖추거나 지켜야 할 규정 중 일부는 조사권한이 없는 활동가가 조사하고 확인하는 데 제약이 존재했다.
-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동물판매업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답변에서는 시정이 요구되는 업체명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일치 여부의 확인은 불가능했다.

II 조사 결과

1. 영업자의 준수사항 점검 결과

총 5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49개 업체가 동물보호법 내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위반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서 제공의무 미게시 (42개소), 요금표 미게시 (29개소), 개체관리카드 미비치 (24개소), 개별사육시설 동물정보 미표시 (21개소), 계약서상 동물생산업 정보 미기재 (15개소), 영업등록증 미게시(12개소)를 확인했다.

특히, 계약서 제공의무와 계약서 내 동물생산업(업소명 및 주소) 정보의 기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코자 하였다. 그러나 동물구매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체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서 확인이 어려웠다. 따라서 계약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확인불가 △', 계약서를 확인했으나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미준수 X'로 표기하였다.

○ 서울 충무로 애견거리

업체 (5)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위반 항목 수
	등록증 게시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 카드 비치	사육시설 동물정보 표시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 표기	
충무1	O	X	X	O	X	X	4
충무2	O	X	X	O	X	X	4
충무3	O	X	X	O	X	△	3
충무4	O	X	△	O	X	△	2
충무5	O	X	△	O	X	△	2
위반업체 수	0	5	3	0	5	2	

- 대표적인 반려동물 판매업 밀집 지역인 서울 충무로 애견거리의 경우 조사를 진행한 5개 업체 모두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의 경우 모든 업체가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표기는 계약서를 확인한 2개 업체 모두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 동원동별 계약서 양식

매전판매계약서

1. 매건의 표시

동원판매장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별도표)
상 호	출생일	판 매 일 자 수정일	
간호(월생)	판 매 장 소 소재지	판 매 장 지 소재지	
별의 및 성별	업 종	업 종	
판매장시 매건의 확정일자	일 자	입찰등록일자	일 자
매입방법		기초금 구성	
수익자 지분 및 이탈금의 기율	일 음		
동원등록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비)	일 음		
기타사항	일 음		

2. 계약조건

(제1조) 위 매건에 대한 매인과 매수인은 합방합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판매 일자	년	월	일
판매 금액			

(제2조) 위 표시내용이 허위이거나 구입한 동원에 정정발령 등 허가가 있을 시는 매수인은
소매자 분정발령기준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3통씩 갖기로 한다.

[기타사항]

매도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인)	
매수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인)	

매전 분양 계약서(구매자용)

1. 매건의 표시

동원판매장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별도표)
상 호	출생일	판 매 일 자 수정일	
간호(월생)	판 매 장 소 소재지	판 매 장 지 소재지	
별의 및 성별	업 종	업 종	
판매장시 매건의 확정일자	일 자	입찰등록일자	일 자
매입방법		기초금 구성	
수익자 지분 및 이탈금의 기율	일 음		
동원등록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비)	일 음		
기타사항	일 음		

2. 계약조건

(제1조) 위 매건에 대한 매인과 매수인은 합방합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분양 일자	년	월	일
분양 금액			

(제2조) 위 표시내용이 허위거나 구입한 동원에 정정발령 등 허가가 있을 시는 매수인은
소매자 분정발령기준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교환 및 환불)

(제3조)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3통씩 갖기로 한다.

[기타사항]

매도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인)	
매수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인)	

매전 분양 계약서(구매자용)

1. 매건의 표시

동원판매장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별도표)
상 호	출생일	판 매 일 자 수정일	
간호(월생)	판 매 장 소 소재지	판 매 장 지 소재지	
별의 및 성별	업 종	업 종	
판매장시 매건의 확정일자	일 자	입찰등록일자	일 자
매입방법		기초금 구성	
수익자 지분 및 이탈금의 기율	일 음		
동원등록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비)	일 음		
기타사항	일 음		

2. 계약조건

(제1조) 위 매건에 대한 매인과 매수인은 합방합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분양 일자	년	월	일
분양 금액			

(제2조) 위 표시내용이 허위거나 구입한 동원에 정정발령 등 허가가 있을 시는 매수인은
소매자 분정발령기준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교환 및 환불)

(제3조)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3통씩 갖기로 한다.

[기타사항]

매도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인)	
매수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인)	

매전 분양 계약서(구매자용)

1. 매건의 표시

동원판매장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별도표)
상 호	출생일	판 매 일 자 수정일	
간호(월생)	판 매 장 소 소재지	판 매 장 지 소재지	
별의 및 성별	업 종	업 종	
판매장시 매건의 확정일자	일 자	입찰등록일자	일 자
매입방법		기초금 구성	
수익자 지분 및 이탈금의 기율	일 음		
동원등록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비)	일 음		
기타사항	일 음		

2. 계약조건

(제1조) 위 매건에 대한 매인과 매수인은 합방합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분양 일자	년	월	일
분양 금액			

(제2조) 위 표시내용이 허위거나 구입한 동원에 정정발령 등 허가가 있을 시는 매수인은
소매자 분정발령기준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교환 및 환불)

(제3조)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3통씩 갖기로 한다.

[기타사항]

매도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인)	
매수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인)	

업체 (5)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등록증 게시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 카드 비치	사육시설 동물정보 표시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 표기	위반 항목 수
수원1	O	X	△	X	X	△	3
수원2	X	X	△	X	X	△	4
수원3	X	X	△	X	X	△	4
수원4	X	X	X	X	X	△	5
수원5	X	X	△	X	X	△	4
위반업체 수	4	5	1	5	5	0	

- 4 -

○ 대구 반월동 애견거리

업체 (12)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위반 항목 수
	등록증	게시요금표	게시	개체관리 카드 비치	사육시설 동물정보 표시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 표기	
대구1	O	O	△	X	X	△		2
대구2	O	X	△	O	X	△		2
대구3	O	O	△	O	X	X		1
대구4	X	O	△	O	X	△		2
대구5	O	O	△	O	O	X		1
대구6	O	O	△	O	O	X		1
대구7	O	O	△	O	O	X		1
대구8	O	O	X	O	O	O		1
대구9	O	O	O	O	O	O		-
대구10	O	X	△	O	X	△		2
대구11	O	X	O	O	X	X		3
대구12	X	X	△	X	X	△		4
위반업체 수	2	4	1	2	7	5		

- 대구 반월동 애견거리는 대부분의 업체의 위반항목이 1~2개로, 타 지역에 비해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실태에 있어 양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항목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업체에 그쳤다.

[충무로 애견거리 계약서 샘플]

<p>생산업자 정보 미포함 계약서(대구3)</p>	<p>생산업자 정보 미포함 계약서(대구11)</p>
-----------------------------	------------------------------

○ 부산 양정동 애견거리

업체 (17)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등록증 게시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 카드 비치	사육시설 동물정보 표시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 표기	위반 항목 수
부산1	O	O	△	X	X	X	3
부산2	O	X	X	X	X	△	4
부산3	O	O	X	X	X	△	3
부산4	O	X	X	X	X	X	5
부산5	O	X	△	X	X	O	3
부산6	O	O	X	O	O	△	1
부산7	O	O	O	X	X	O	2
부산8	O	O	X	X	X	△	3
부산9	O	O	X	X	X	△	3
부산10	O	O	X	X	△	△	2
부산11	O	O	X	X	X	△	3
부산12	O	X	X	O	X	△	3
부산13	O	X	X	X	X	△	4
부산14	O	X	X	X	X	△	4
부산15	O	X	X	X	X	△	4
부산16	O	X	X	X	X	△	4
부산17	O	O	X	O	X	△	2
위반업체 수	0	8	14	14	15	2	

- 대부분의 업체가 △요금표 게시 의무 △개체관리 카드 비치 △개별사육시설 동물정보표시 △계약서 제공의무를 미준수하고 있었다.
- 부산 양정동 애견거리 역시 모든 업체가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C업체

지점 (7)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등록증 게시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 카드 비치	사육시설 동물정보 표시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 표기	위반 항목 수
부천점	X	X	X	O	X	X	5
안양점	X	X	△	O	X	△	3
수원점	O	O	X	O	X	△	2
은평점	X	X	△	O	X	X	4
인천점	O	O	X	O	X	X	3
광진점	X	X	△	O	△	X	3
강서점	O	O	△	O	X	△	1
위반지점 수	4	4	3	0	6	4	

- 업체 현황 :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등 전국 1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스로 국내 최대규모 분양샵이라고 홍보 중이다. 그럼에도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있어서는 낙제점을 면키 어려운 수준이다.
- 조사를 진행한 C업체의 모든 지점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와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 표기는 확인이 불가능한 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 D업체

지점 (4)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록증 게시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 카드 비치	사육시설 동물정보 표시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 표기	위반 항목 수
마포점	X	X	△	O	X	X	4
잠실점	X	X	X	O	X	△	4
일산점	O	O	△	O	X	O	1
인천점	O	X	X	O	X	X	4
위반지점 수	2	3	2	0	4	2	

- 업체 현황 : D업체는 서울, 부산, 인천, 천안 등지에 10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유기동

물을 이용한 영업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곳이다.

- D업체의 경우 전체 10개 지점 중 4개 지점을 조사했으며, 4개 지점 모두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는 모든 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영업장 내 영업등록증 게시 및 개체별 정보 (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표시는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부터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위반한 업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더욱이 새로 개정된 사항들을 준수하는 업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핵심적인 사항인 '계약서 제공의무'와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 기재'의 경우, 계약서 제공의무를 구두로 설명하거나 어떤 안내도 들을 수 없었으며 계약서 내 동물생산업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업소가 태반이었다. 동물보호법상 규정과 실제 동물판매업 현장에서의 그 이행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지자체 동물판매업체 점검 결과 (2018년 시행, 2019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취합)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동물자유연대가 진행한 조사에서 총 50개의 업소 중 6개의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이었다. 지난 해 물리스펫샵 역시 동물을 판매하는 모든 지점에서 위반사항이 밝혀진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모든 판매업소에서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판매업소들의 무관심과 무책임도 문제이지만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과연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지역 내 동물판매업체들을 대상 현장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점검 결과를 비교하고자, 동물판매업 점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동물자유연대 현장조사 결과 및 지자체 점검 결과 비교표]

동물자유연대 현장조사 결과		지자체 점검 결과	
지역	위반업체 수	지역	위반업체수
충무로 애견거리	5	서울 중구	1
수원 남문 애견거리	5	수원시	0
대구 반월동 애견거리	11	대구 중구	0
부산 양정동 애견거리	17	부산 진구	0

우려대로 동물자유연대의 현장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점검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중구와 수원시, 대구 중구, 부산 진구 4개 지역에서 동물자유연대의 조사결과에서는 39개 업체 중 3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지만 지자체 점검결과에서는 총무로 애견거리가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만 단 한 곳*의 위반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3개 지역에서는 위반업체가 단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 점검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실한 점검의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동물자유연대가 올해 1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점검결과의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3월 말까지도 점검결과가 취합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다.

III 결론 및 시사점

1. 판매업 관련 규정의 사문화 우려

201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세상을 놀라게 한 강아지공장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강아지공장의 참혹하고 열악한 현실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법개정 요구로 이어졌다. 그리고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고, 반려동물 영업 종류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강아지공장이 횡행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가 자신이 분양 받는 강아지가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는지 알 수 없는 정보의 불투명성이다. 당시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경매장, 펫샵을 거쳐 소비자의 품으로 강아지들이 도달하기까지의 과정과 생산업자, 부모견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 개정 과정에서 이중 극히 일부만이 적용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법의 시행 이후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 진행된 '물리스펫샵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조사 보고'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의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법 시행 1년을 맞아 동물자유연대가 진행한 전국의 반려동물 판매업 밀집지역과 대규모 판매업체의 조사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현장의 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더욱이 같은 내용의 조사로 문제 제기가 되고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관련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불러일으킨다.

2. 관리·감독 소홀한 지자체와 방관하는 정부

판매업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1차 적인 책임은 당연히 이를 준수해야 했음에도 따르지 않은 판매업자들에게 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반복된다면 이

* 정보공개청구 결과에는 위반업체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물자유연대에서 조사를 진행한 업체와 동일업체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군·구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 점검마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의 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업체에 그것도 일부 항목에 한해 조사했음에도 위반 업체 수가 39개와 1개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형식적인 조사라고 부르는 것조차 민망한 결과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정부 또한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했어야 한다. 점검과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지자체의 방관을 부추기는 꼴이다.

3. 지자체 전담자 배치와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지자체도 나름의 사정은 있다. 전담자도 아닌 담당자가 지역 내 수십, 수백 곳의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점검기간이 되면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까지 투입되고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나가다보니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최소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담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의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민간영역의 인력을 활용한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4. 반려동물 이력제의 도입과 관련 시스템 구축

현재 정부는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에 대한 거래내역으로부터 도축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와 돼지에 이어 2018년 11월부터는 닭, 오리, 계란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자의 수가 훨씬 많고 유통과정도 복잡한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본인이 구매한 축산물의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구분	전체	축협(농협)	낙농협동조합	한우조합	한우협회
개소수	135	118(1)	8	5	4

반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강아지공장의 폐해를 없애기위해 필요한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확인이 현재 규정과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의 출생으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www.animals.or.kr